

6 기획-달라진 시설대여 지침



평화의 전당(사진1), 크리운관(사진2)

(사진=대학주보DB)

달라진 교내 시설 대여 지침 학내행사에 대한 기준 모호 평전 “대여 기준 논의 중”

강다은 기자 ekdms200202@khu.ac.kr

최근 거리두기가 완화되며 코로나로 인해 정체됐던 학내 행사가 활발하게 재개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교내 시설 대여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다. 우리 신문은 교내 시설(평화의 전당, 크리운관 등)의 대여 현황과 변화한 방침에 관해 살펴봤다.

이전과 달라진 대여 방침 시설 대여에 혼선

지난 8월 22일, 서울캠퍼스(서울캠) 소통간담회에서 의과대학(의대), 치과대학(치대), 한의과대학(한의대) 학생회는 교내 시설 대여와 관련해 건의사항을 제기했다. 이 날 각 학생회는 단과대학 행사 진행

을 위해 평화의 전당에 시설 대여를 문의했지만 코로나 이전과 달라진 대여 방침에 혼란을 겪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에는 없었던 대여료가 부과되거나, 단과대학 행정실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의대 학생회 김석준(의학 2018) 회장은 “대여료 납부, 행정 직원 주말 출근 등의 조건을 통보받았다”며 “음향/조명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도 제출해 허가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의대 학

생회 송인준(한의학 2019) 회장 역시 “7월 초 한의대가 대관을 시도할 때 모순된 공지를 받았다”며 “학생들의 대관 신청은 일주일 전부터 가능하나, 음향 장비 문의는 (별도로) 10일 전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고 밝혔다.

이어 송 회장은 “9월 내내 피스바 행사로 인하여 단 하루도 크리운관 대여가 불가능하다고 답변받았다”면서 “8월 중순이 돼서야 피스바 주간을 제외한 다른 날에 크리운관 대여 시도가 가능하다고 공지가 변경됐다”고 전했다. 더불어 시설 대여 신청도 “행정실을 통해서만 (시설 대여를) 가능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시설 대여 가능 여부를 정할 내부기준 모호

평화의 전당에 따르면, 학생들이 평화의 전당 대여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총학생회나 중앙동아리는 학생지원센터를 통해

공식 단체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단과대학 단위의 경우 단과대학 행정실 및 학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실을 통해 평화의 전당과 소통해야 한다. 다만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공식 행사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외부 행사로 분류돼 시설 사용료가 부과된다.

단과대학 행정실에 시설 대여를 위탁하는 방침에 대해 평화의 전당 김준현 부관장은 “단과대학의 동아리 수가 많아 평화의 전당 측에서 (시설 대여를 요청하는 동아리가) 공식 동아리인지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며 “단과대학을 대표할 수 있는 동아리인지, 단과 학생 간의 취미활동인지의 여부는 단과대학 행정실에 의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 회장은 단과대학 행정실에서는 학생 행사의 공식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송 회장은 “(평화의 전당 측이) 시설 대여 신청을 위해 행정실을 경유한 연락만 받고 있다”며 “시설 대여의 공식·비공식 여부 판단을 위해 행정실이 아닌 학생 측으로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시설 대여를 위해 ‘인포21’과 같은 시스템

이 아닌 평화의 전당 측과 직접 연락해야 한다”며 대여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주당 52시간 근무제로 대여 우선순위 지정했지만 행정실 직원 근무 역시 어려워

평화의 전당이 제시한 내부 행사에는 ▲신입생 신체검사 ▲취업설명회 ▲외국인 학생 비자 서비스 ▲수업 ▲실습 ▲총학생회 축제 등의 중앙부서 주관 행사가 포함된다. 평화의 전당 김 부관장은 “주당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평화의 전당, 크리운관, 네오누리관, 동아리 연습실, 경영대학 오비스홀 등의 많은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 (시설 대여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20년 9월 1일 제정된 「공간 대관 관리지침」에서 외부행사는 공간 사용료 외의 ▲전기수도 ▲냉난방비 ▲환경부담금 ▲행사지원인건비 등 실비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 부관장은 “시설 유지를 위한 유지 관리 비용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교내 공식 행사가 아닐 경우) 대관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평화의 전당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사는 시설 내 안전 확보 및 직원 기본 상주를 조건으로 한다. 평화의 전당 측은 “행사 진행 시에 직원 상주가 불가할 경우 안전관리 책임자가 없어 대관이 어렵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안전 방침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평화의 전당 측은 학생 측이 불편함을 제기한 대여료와 장비 문제에 대해 변화하는 안전 수칙에 맞춰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평화의 전당 측뿐 아니라 단과대학 행정실 측 역시 주당 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을 받고 있어 실질적으로 안전을 위해 행사의 상주 직원을 구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송 회장은 “직원의 복리와 학생의 자율 사이에서 타협을 갖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며 평화의 전당 측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김 부관장은 “공식 행사의 판단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행정실 및 평화의 전당, 예산팀과의 소통을 통해 관리 지침을 해석하는 범위를 어떻게 제한할지를 정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공간 대관 관리지침에 따라 교내 행사·외부 행사 판단 기준에 대해 학생센터, 단과대학 행정실, 예산팀과 논의 중”이라며 추후 시설 대여 기준이 조정될 수 있음을 밝혔다.